연구총서 2000-30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외교·안보 분야 중심으로

최 춘 흠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탈냉전이후 중국의 입장이 한국정부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방향에 순기능적으로만 작용해 온 것은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 안보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북한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도 다른 정책안을 제시하여 왔다. 이는 소위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1. 서 언

한반도 외교 및 안보상황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간 지속되어온 미·북 베를린 장거리 미사일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국전쟁이후 최초로 실현됨으로써 남북한간의 화해 분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남북한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및 안보에 대한 입장을 분석함에 있어 첫째, 미·북 제네바 핵합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한반도 전략기조를 기술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정책을 대북 및 대한국 외교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중국의 동북아 정세 인식과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

가. 중국의 동북아 정세 인식

중국은 미·일·중·러 4국간의 관계가 가장 첨예한 다음과 같은 역내 관계(역내 군사동맹 강화, 군사 기술력 강조, 러시아의 핵사용 범위 확대 등)를 지니고 있어 역내 군사력 증강을 억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정세는 미·북 관계 개선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이 거론하고 있는 동북아 불안정 요인 및 긍정적인 요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역내 군사동맹 강화

중국은 1999년 NATO가 유엔안보리 상임위(UNSC)의 결의안을 무시한 미국의 신 NATO주의에 따라 유고연방에 폭격을 가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우월한 지위 확보 및 인권, 대량 살상무기 확대, 소수민족 및 인종 분규, 난민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동맹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 군사 기술력 강조

중국은 미국의 NMD 프로그램 및 TMD 프로그램 가동은 미군사력 우위를 확보케 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전략미사일 균형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만과 한국 등이 이에

참여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TMD 계획에 기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보수집과 선제공격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되어 일본의 군사기술이 향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 러시아의 핵사용 확대

중국은 특히 2000년 4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는 NATO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타국의 침략시 핵무기 선제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트린을 표방한 것은 자칫하면 동북아 안정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미·북 관계 개선

중국은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이 더욱 가시화 되자 미국의 대북 긴장완화 정책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북간 관계 개선이 중국에도 이롭다는 입장에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2000. 10. 25)을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북간 적대정책 포기선언이나 미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인해 단시일 안에 양국간 외교관계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반세기에 걸친 미·북 양국간의 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 인해 상호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상기의 불안정 요인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영향력이 강해

동북아 안정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평화공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나. 중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 기조

중국의 한반도 전략기조는 다음과 같은 중요도 순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시키고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을 사전에 협상을 통해 제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기조로 삼고 있다.

둘째,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통제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중국은 주변 강국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군사개입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억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방법, 절차, 목표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자주적이어야 하며, 외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남·북한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중국의 한반도 정책: 대남북한 외교 정책

가. 중국의 대북한 외교 정책

중국의 입장에 따라 중국은 우선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지

않도록 대북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정치적 유대관계 복원에 주력하는 개입 전략을 전개하는 한편, 북한의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개선,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 등을 지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북한이 자국의 완충지역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이다.

중국은 남북한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경 방문을 통해 북한과 비공식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존해 있음을 과시하였다. 중·북 북경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과의 조율을 통해 자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안보 현안에 대해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중국의 대북 안보협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및 교역 강화 전략은 무엇보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억제하려는 데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불안으로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국경탈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중·북 정치관계가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식량 및 에너지 분야의 무상지원은 점차적으로 증가되었다. 김정일의 북경 방문 직후 북경 당국은 향후 대북 지원규모가 4억 달러로 결정되었음을 이례적으로 표명하였다.

중국은 2000년 북한경제가 한국 및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경제난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1994~1995년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1978년에 버금가는 경제개혁과 개방을 단행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북한

이 중국식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으로도 전망하지 않고 있다. 향후 중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북 경제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한의 대중국 경제 및 교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 중국의 대한국 외교 정책

중국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대한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정치관계 증진을 점진적으로 도모한다는 기본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 및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한국측은 함정의 상호 방문과 상호 훈련 안을 제외하고는 해상수색, 구조훈련, 군사교육기관의 상호 교환 및 교육 증대 등에 대해 중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중국은 한국이 대북 포용정책으로 적극 추진하는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특히 한국의 대북 물자지원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0년도 무역액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로 인한 중국의 대한국 물자 및 부속품 수입이 증가되어 2000년 상반기에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08억 달러로 대중 수입액인 53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여 약 5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중국의 대남 경제협력은 보다 강화·확대될 것이나 자국의 경제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의 대남북한 전략 및 정책을 요약하면, 중국의 남북한 현상유지 선호 전략이 추진되어 온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남북한 관계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른 대한국 안보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중·북 정치 및 안보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괄적인 대남북한 정책이 한반도 평화과정 구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남북한을 지지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노출하고 있다.

4. 중국의 대남북한 안보 정책: 사안별 분석

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통제 문제

북한을 핵 잠재보유국으로 보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사용 기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사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입장에 있다. 중국은 현재 핵무기 선제불사용(no-first-use)을 표명하고 있어 미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하지 않은 점과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확대 가능성을 표명한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선제불사용 포기를 선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만에 대해서만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으나 묵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 개발에 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문제로 인해 북한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이라는 카드를 대미 안보 보장을 얻으려는 데 크게 활용할 것으로 보고 미·북 미사일 협상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TMD와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미사일 개발 기술이 제고되어 동아시아에서 향유해 오고 있는 중국의 전략미사일 우위가 훼손되는 점으로서 장기적으로 일·북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마저 포기하기를 원할 것이다.

나. 정전협정 유지문제

중국은 그 동안 남·북 관계가 안정치 못한 것이 남북이 정치적으로 양국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데 연유한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정치적 협상과 합의에 의한 남북한 평화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정전협정이 폐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치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국간에 국지적인 돌발사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4자회담 틀 내에서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한 평화협정이 단기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지만 평화협정이 실현될 경우 이를 수용하거나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이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체결 당사자 문제에 대해 중국은 비록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이기 하지만 자국이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임을 크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북한이 정전협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동조할 가능

성이 그 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주한미군 존재문제

중국 지도층은 전면적인 주한미군의 철수가 초래할 동북아 안보에서의 힘의 공백을 우려함과 동시에 적어도 향후 10년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개선에 따른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의 감축을 자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남북한이 평화협정에 합의할 경우,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단독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위상이 주한미군 감축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 군사외교를 더욱 강화·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 남북한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

중국은 한반도정세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취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예측 못할 도발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으나, 남북한 정상회담이후 남북한간 정치적 긴장감이 감소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남북간 긴장완화 조치가 실현되고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 탈북자 문제

중국은 1982년 「유엔난민협약」과 「유엔난민의정서」에 가입하여 난민(refugees)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실현시켜 오고 있다. 중국은 처음에는 자국 내에는 탈북자가 없으며 다만 국경을 불법으로 잠입하여 식량을 구하려 오는 변경주민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8년 2월 중국 정부는 탈북자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불법으로 월경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나아가 1999년 2월에는 북한주민들의 탈북 행위 자체를 억제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이라든지 '난민'이라는 개념에서 처리하기를 부정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과의 협조를 꺼려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 있는 자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UNHCR이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암시하고 북한당국과 중국과의 협조아래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국제규범, 중국 국내법과 인권차원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은 이들 탈북자를 1960년에 체결된 「중·북 탈주자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과 1986년 체결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따라 강제 송환 조치하고 있다.

5. 결어: 전망

중국은 향후 동북아 정세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긍

정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한반도를 둘려싼 주변 강국 간의 첨예한 모순 등으로 인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과는 직접적인 군사대결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에 따라 우선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안보대화를 증진시키고 있다. 즉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 속에서 한반도 균형외교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남북한 스스로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대화와 협상을 주도하여야만 한반도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미국이 한반도에서 패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시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반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을 비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북한간 평화협정이 4자회담 틀 내에서 실현되기를 원하고 남북한이 협의하고 합의한 협정을 미국이 함께 수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북한의 주장인 유엔사령부의 완전한 해체를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감축을 요구할 것이나 주

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이 진전되면 될수록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다만 주한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남북간 국지적인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정치적 망명자'라든지 '난민'이라는 개념에서 처리하기를 부정하여 UNHCR과의 협조를 꺼려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 있는 자격을 결여하고 때문에 UNHCR이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암시하고 북한당국과 중국과의 협조아래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목 차

Ⅰ. 서 언 ····· 1

Ⅱ. 중국의 동북아 정세 인식과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 ····· 2
1. 중국의 동북아 정세 인식 ····· 2
가. 역내 군사동맹 강화 ····· 3
나. 군사 기술력 강조 ····· 5
다. 러시아의 핵사용 확대 ····· 6
라. 미·북 관계 개선 ····· 6
2. 중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 기조 ····· 8

Ⅲ. 중국의 한반도 정책: 대남북한 외교 정책 ····· 11
1. 중국의 대북한 외교 정책 ····· 11
2. 중국의 대한국 외교 정책 ····· 18

Ⅳ. 중국의 대남북한 안보 정책: 사안별 분석 ····· 22
1.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통제 문제 ····· 22
2. 정전협정 유지문제 ····· 26
3. 주한미군 존재문제 ····· 27
4. 남북한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 ····· 29
5. 탈북자 문제 ····· 30

Ⅴ. 결 어: 전망 ····· 37

참고문헌 ····· 40

I. 서 언

한반도 외교 및 안보상황이 변화되고 있다. 그간 지속되어온 미·북 베를린 장거리 미사일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국전쟁이후 최초로 실현됨으로써 남북한간의 화해 분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남북한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중국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한국 관계개선을 가장 먼저 촉구하여 왔다.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상이 점차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순기능적으로만 작용해 온 것은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 안보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북한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부분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정책상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녀 왔기 때문이다. 이는 소위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및 안보에 대한 입장을 분석함에 있어 첫째, 미·북 제네바 핵합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한반도 전략기조를 기술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정책을 대북 및 대한국 외교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동북아 정세 인식과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

1. 중국의 동북아 정세 인식

중국은 자국의 정치적 안정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코소보 사태이후 나타난 미국주도의 신국제주의로 인해[1] 자국의 안보상의 기존의 이익과 경제발전이 훼손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여 왔다.[2] 중국은 전세계적인 탈냉전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하여 왔다. 중국은 냉전적 사고의 상존, 초강대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일부 국가들의 군사집단 확대 및 동맹 강화 움직임 등으로 인해 기존의 안정세력이 크게 저해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군비통제와 군축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3]

중국은 동북아 국제질서가 강대국간의 역학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미·일·중·러 4국간의 관계가 가장 첨예한 다음과 같은 역내관계(역내 군사동맹 강화, 군사 기술력 강조, 러시아의 핵사용 범위 확대 등)를 지니고 있어

---

1) 沈國放 유엔주재 중국부대표는 제54차 유엔총회 제1차회의에서 미국주도의 TMD계획과 ABM 조약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군비통제와 군비축소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언급하고 냉전적 사고는 상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권주의 강권주의인 신국가주의가 대두되고 있어 세계는 더욱 불안정하다고 언급하였다. “Shen Guofang on Building New Security Concept,” FBIS-CHI-1999-1014.

2) 중국은 「政治報告」를 통해 등소평이 제창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행동지침으로 표방하고 특히 경제개혁의 비약적 발전, 정치개혁의 추진, 정신문명 건설의 강화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人民日報」, 1997. 9. 18~9. 20.

3) Xinhua, "International Community Urges Greater Disarmament Efforts," FBIS-CHI-1999-1023.

역내 군사력 증강을 억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4] 향후 동북아 정세는 미·북 관계 개선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이 거론하고 있는 동북아 불안정 요인 및 긍정적인 요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역내 군사동맹 강화

미국의 '패권적 신개입주의'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1998년 7월에 발표된 「中國的國防」[5]과 2000년 10월 16일에 발표된 「中國的國防 2000」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첫째, 1999년 NATO가 유엔 안보리 상임위(UNSC)의 결의안을 무시한 미국의 신 NATO주의에 따라 유고연방에 폭격을 가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우월한 지위 확보 및 인권, 대량 살상무기 확대, 소수민족 및 인종 분규, 난민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동아시아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둘째,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신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것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소 나토화'를 구축하려는 기도이며 이로 인해 미국 주도의 역내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6] 중국은 특히 기존의 미·일 조약에 규정된 일본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데 대해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은 주의를

4) Chao Chien, "Beware of the Arms Race Trap When Building a Hi-tech Army," Ching Pao, FBIS-1999-0907.
5) 「人民日報」, 1998. 7. 28.
6) 중국은 미국의 TMD 계획을 'Asian version of NATO'라고 비난하고 있다. FBIS-CHI-2000-0229.

기울이어야 할 것임을 경고하여 왔다.[7] 셋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간 전략상 alignment는 비록 대북 위협을 견제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만 북한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는 대중국 견제로 발전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미사일방위(NMD) 구축을 위해 러시아에게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러시아는 미국의 NMD 구축은 공격형 핵무기의 균형을 불안정케 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8] 미국주도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계획을 통한 국제질서 강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우려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탕쟈쉬옌(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은 2000년 7월 27일 제7차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 아·태 지역은 지속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NMD로 인해 지역 안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역시 현 국제정세가 결코 평화와 번영이라고 단정할 수만 없다고 언급하고 이는 주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라는 구실로 대북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한 바 있다.[9]

---

7) 「中國時報」, 1998. 5. 26.

8) Jonathan Schell, "The Folly of Arms Control," *Foreign Affairs,* Volume 79, No. 5, September/October 2000, p. 26.

9) 중국은 코소보 사태이후 중국은 기존에 추진하였던 국제정치의 두 개념인 '평화와 발전'이라는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고 대미 견제를 위한 국제적 연합전선 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Wang Jisi, "China's New Ident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Peaceful Order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joint international seminar by the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0. 5. 27, p. 9.

나. 군사 기술력 강조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노력으로 인해 결국은 외계(outer space)에까지 국가간 군비경쟁이 초래되었는 바, 이는 미국이 외계를 우선적으로 통제하여 미국 및 동맹국가들의 지상군 작전수행에서 군사적 우위를 더욱 확보하려는 데 연유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위성항로체계(satellite navigation systems), early warning planes, stealth weapons, cruiser missiles, laser-guided bombs 등 각종 군사기술이 신속한 전쟁 승리를 보증하고 있으며 미국의 NMD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그 후속 조치로 한국 및 대만 국가들의 TMD 계획 참여가 종용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10]

즉 중국은 미국의 NMD 프로그램 및 TMD 프로그램 가동은 미군사력 우위를 확보케 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전략미사일 균형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만과 한국 등이 이에 참여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1]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TMD 계획에 기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보수집과 선제공격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되어 일본의 군사기술이 향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12] 이러한 중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전략미사일 구축에 많은 재정투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13]

---

10) 『人民日報』, 1998. 7. 28.
11) Wang Jisi, "China's New Ident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p. 8.
12) 1999 여름에 NMD 계획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고 미 행정부가 이를 비준하였으며 1999년 10월 처음으로 미사일 요격발사 실험이 있었다. 2007년경 미 본토 전역에 실전 배치토록 되어 있다.
13) Brad Roberts, Robert A. Manning, and Ronald N. Montaperto,

다. 러시아의 핵사용 확대

중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가안보 가이드라인」(National Security Guidelines) 서명으로(2000. 2) 러시아가 기존의 전략 미사일의 수를 감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특히 2000년 4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는 NATO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타국의 침략시 핵무기 선제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트린을 표방한 것은 자칫하면 동북아 안정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 미·북 관계 개선

1950년 한국전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하여 북한에 대해 완전한 제재를 가하고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냉전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이 기존의 대북 정책에 긍정적인 조치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페리 전 국방장관의 방북이후 낸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화와 봉쇄' 정책을 병행 추구하면서 대북 대화와 접촉을 증대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1999년 9월 50년간 지속되어 온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를 표명한 것을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도 일맥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중국은 보고

"China: The Forgotten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0, pp. 53~63. 중국은 1999년 10월 전략핵 무기의 2차 공격 능력을 제고키 위해 약 97억 달러의 추가 재정을 확정한 바 있다.

있다. 중국은 북한이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및 필리핀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아세안회의에도 참석한 점에서 북한의 외교정책이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조명록 북한특사의 방미로(2000. 10) 미국과 북한이 양국간 적대관계가 종식되었음을 공동성명으로 표명한 데 대해 미·북관계의 역사적인 진전으로 해석하였다. 북한은 미·북 성명에서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할 것과 제네바 핵합의 준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미국은 또한 대북 식량 및 의약품을 위시한 경제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남북한간의 대화와 화해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할 것과 북한과 미군병사 유해 색출에 공조할 것임을 표방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은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교환과 경제협력과 교역을 증진시킬 것과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14]

다시 말하면, 중국은 1987년 미국이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은 더욱 공고히 되었으며 냉전이후에도 북한의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로 인해 양국간 모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이 더욱 가시화 되자 미국의 대북 긴장완화 정책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북간 관계 개선이 중국에도 이롭다는 입장에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2000. 10. 25)을 지지하였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북간 적대정책 포기선언이나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인해 단시일 안에 양국간 외교관계가 실현되기는

14) 「人民日報」, 2000. 10. 14.
15) 「人民日報」, 2000. 10. 27.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반세기에 걸친 미·북 양국간의 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 인해 상호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상기의 불안정 요인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영향력이 강해 동북아 안정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평화공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첫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된 주변환경이 요구되는 만큼, 미국에 직접 무력으로 맞서는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동북아 국가들과 선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내정간섭에 관련된 사안이 아닌 한, 미국의 요구와 행위를 가능한 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적어도 21세기 초반에도 유일 초강대국으로 동북아 질서 형성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대미 관계개선 및 유엔에서의 거부권 행사나 다자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면서 기존에 자국이 향유하여 온 핵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제고하고 있다.[16] 이러한 중국의 동북아에 대한 전략기조는 남북한 정상회담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 기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안보전략 기조는 이미 서술한 중국의 동북아 정세 인식에 따른 안보전략 연장선상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중국의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기조는 다

16) Huang Renwei, "Tentative Study of US Strategic Choice in the Asian-Pacific Region," *Shijiejingji yanju(World Economy Study),* No. 1, 1994, pp. 3~7.

음과 같은 중요도 순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면서 협력하는 상황인 현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시키고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을 사전에 협상을 통해 제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 기조로 삼고 있다.

둘째,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통제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17] 중국은 현상태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면 어느 강대국도 한반도에 대한 무력적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과는 선린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미·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주변 강국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군사개입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억제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안정되면 될수록 미국, 일본, 서구 선진국들의 대중국 경제투자 및 무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

17)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미국 내에서 분분하다. 중국의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고 보는 측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어느 국가보다 중국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정책조율이 없는 대북 정책은 포용책이든 강경책이든 성공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리처드 솔로몬 미국 평화연구소 소장의 미 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 청문에서의 입장, 1999. 2. 10.

고 주변국의 무력적 개입이나 간섭 없이 남북한 스스로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대화와 협상을 주도하도록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방법, 절차, 목표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자주적이어야 하며, 외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남·북한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현상태에서 한·미 주도의 통일한국이 급속히 실현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급증될 것이기에 남북한에 대해 균형된 외교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통일과정에서 통일된 한국이 친 중국 성향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반중국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중국의 한반도 정책: 대남북한 외교 정책

1. 중국의 대북한 외교 정책

이미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자국 안보의 완충지대로 존속되어 주변 강국들의 대북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억제하는 것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중 수교이후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김일성 사후에도 관계는 악화되었다. 중국은 대북 관계개선을 위해 대북 지원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식량난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중국은 우선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지 않도록 대북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정치적 유대관계 복원에 주력하는 개입 전략을 전개하는 한편, 북한의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개선,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 등을 지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북한이 자국의 완충지역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 기존에 북한이 담당하였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완충 국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치 않을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선호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인한 미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여 1996년부터[18] 1998년까지 북한과 정치적 관계 복원 및 안보

유대 재개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19], 당시 북한의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20] 1999년에 가서야 중국의 대북한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중·북 관계가 원만치 못한 배경하에서 북한은 중·미간 갈등고조로 인해 중국을 배제한 채(4자회담 초기) 대미 직접협상을 통해 북한체제의 안전 보장을 얻어내려는 입장을 보였고, 중국은 다만 대북 경제난 해소를 위한 경제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이 가시화 되지 않자, 북한 당국은 중국의 지지 없이는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중국 역시 증가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영향력 저지를 위해 대북 관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필요에 의해 양국의 정치적 관계 복원 노력은 1999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의 방중,

---

18) 1996년 7월 부총리 급인 羅幹 중국국무원 비서실장이 「중·북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체결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것과 중국 北海艦隊 소속 두 척의 함정이 남포항을 방문한 것이 주요 사례이다. 「朝鮮日報」, 1996. 7. 22.

19) 김정일은 덩샤오핑 사망에 따른 조전에서 등을 평가하기를 "등소평 동지가 조·중 우위를 위해 행한 공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김일성 사망시 중국이 "비할 데 없이 침통한 심정으로 마음속 가장 깊은 애도와 가장 정성 어린 위문을 전한다"라고 언급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만큼 김정일은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과 대한국 수교정책 등으로 인한 중국의 처사에 소원한 감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1997. 2. 22.

20) *Korea Herald,* 1996. 12. 12. 1995년 6월 김정일은 노동신문 기고에서 중국의 경제자유화 과정이 북한 안보에 해로울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혁명의 배반자들이 사회주의의 이상을 왜곡한 결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형태를 취하는 등 변질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을 지칭하지 않고서도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1996년 3월 중·북한간 고위급 군 인사 방문외교가 이루어지고 중국의 대북 군사무기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약 2.5배로 증가(약 350만 달러 규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개선되지 못했다.

1999년 10월 탕쟈쉬옌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21] 이와 동시에 북한의 중국인민군 한국전 참전기념행사 개최[22] 등으로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다.

김영남의 방중시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 발전을 우선 강조하고 남북관계, 북·미 및 북·일 관계 진전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중국이 행하였던 경제발전 방향을 취할 것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23]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관계

---

21) 탕자쉬옌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은 1999년 고위급 인사의 첫 방북이며, 탕자쉬옌은 1995년 중국 외교부 부부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The Korea Times*(Internet version); "Prospects for PRC Foreign Minister's North Korea Visit Viewed," FBIS-EAS-1999-1005.

22) 1999년 10월 북한은 중국인민군 한국전 참전 49주년 기념 행사를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하고 중국군의 한국전 역할을 크게 찬양하였다. "DPRK Ministry Marks Anniversary of PRC Joining War," FBIS-CHI-1999-1102.

23) *The Korea Times* (Internet version); "Further on Jiang Zemin Meeting Kim Yong-nam," FBIS-CHI-1999-0608; Jiang Zemin said: "The CPC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ve always treasured PRC-DPRK traditional friendship. At present, both of our countries are building socialism in our own ways and in accordance with our respective national conditions....further developing the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We support the stand of both the north and south sides on realizing independent peaceful reunification, hope the north and south sides of Korea will improve their relations, and support the DPRK in its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the EU, and other Western countries, and to finally realize normal relations with them....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world has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multi-polarization, but is still far from being peaceful....The important task before the people of the world is to oppose hegemony and power politics an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rational new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그러나, 리펑 중국총리는 1996년 7월 방중한 북한 대표단에게 이미 '내정불간섭' 정책을 떠나, 북한의 식량난 극복을 위해서는 중국식 농가생산 책임제를

개선을 북·미나 북·일 관계 개선보다 더욱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없이는 한·미·일이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 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동시에 북한의 대남 관계개선 노력이 불충분한 점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국은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이 없는 미·북 관계개선은 미국의 대북 영향력만 제고시킬 것으로 우려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북한에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전반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의 도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기 전에는 중국식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국은 남북한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경 방문을 통해 북한과 비공식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존해 있음을 과시하였다. 중·북 북경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과의 조율을 통해 자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안보 현안에 대해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보다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중·북 양국 정상은 북경 정상회담시(2000. 6) '지역안정 협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라는 사항 특히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김영남의 방중은 여러모로 특징이 있었다. 첫째, 1991년 김일성의 방중이후 북한 최고위 정부 관계자의 방문단인 점, 둘째, 군사관련 군인들이 북한 대표단의 중심인 점, 셋째, 북한 방문단이 중국경제 발전상을 관람하지 않은 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Samuel S. Kim, "North Korea in 1999: Bringing The Grand Chollima March Back In," *Asian Survey,* VOL. XL, NO. 1, JANUARY/FEBRUARY 2000, pp. 156~157.

정을 위한 상호 협력과 유엔 및 국제질서 형성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여 양국간의 안보협력 관계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 장쩌민 주석은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평화공존 5원칙'을 제시하면서 남북한이 맺은 7·4 공동성명에 명기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지지하여 남·북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에 의한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다.[24] 또한 중국은 자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논리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북한에 권고함으로써 북한이 고려연방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한반도 통일실현보다는 현상태의 2체제 즉 한국의 체제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방식의 통일방안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음을 북한에 간접적으로 표명한 결과로 남북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통일방안에 서로 동의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중국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동조하지 않았다. 북한 언론은 중·북 정상회담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5개 안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수출에 관련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중·북 북경 정상회담이후 양국이 발표한 문건에 의하면, 북한은 '전통적이고 불멸이며 피로 맺어진 조·중관계'로 표현한 데 비해, 중국의 문건에는 북한을 표현하는 문구가 없었다.[25]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후 중국은 미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여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직전 츠하오톈(遲浩田) 국방부장을 평양에 보내 중·북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발전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안보협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4) 『大韓每日』, 2000. 6. 3.
25) 『朝鮮日報』, 2000. 6. 5.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및 교역 강화 전략은 무엇보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억제하려는 데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불안으로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국경탈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중·북 정치관계가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식량 및 에너지 분야의 무상지원은 점차적으로 증가되었다. 중국의 곡물 12만 톤(1996년), 옥수수 19.5만 톤(1997년), 쌀 1.2만 톤(1997년), 곡물 4만 톤(1998년 6월), 곡물 6만 톤과 화학비료 2만 톤(1998년 7월) 등이 무상 지원되었으며,[26] 특히 1996년 7월 루어칸(羅干)이 중·북 우호조약 제35주년 기념차 방북하였을 시, 20만 톤을 요구한 북한에 대해 중국은 식량 15만 톤, 코크스 40만 톤을 무상 원조하기로 약속하는 등[27] 중국의 무상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김정일의 북경 방문 직후 북경 당국은 향후 대북 지원규모가 4억 달러로 결정되었음을 이례적으로 표명하였다.

중·북 교역 면에서 북한은 1997년 1/4 분기 동안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곡물을 비롯한 식량, 식료품, 사료 및 종자 등의 도입을 대폭 늘렸다. 1/4 분기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수출 1,500만 달러, 수입 9,300만 달러 등 총 1억 800만 달러로 전년도의 1/4 분기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동·식물성유지 12배, 종자 및 사료 3배, 밀가루, 옥수수가루 1.89배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석유, 코크스 및 플라스틱 제품, 면화 등은 각각 53, 66,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자 및 약용식물이 8배 이상, 목재, 목제품과 철강제품이 각각 2배 이상 수출되었다.[28] 북한의 대중국 식량 및 식료품 도입

---

26) 통일부, 「북한동향」, 390호 (1998. 7. 4~10), p. 29.

27) Economic Intelligence Unit (EUI), *Country Report: South Korea, North Korea*, 3rd quarter (London: EUI, 1999), pp. 42~43.

량이 크게 늘어난 데는 북한의 식량 부족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1998년 경우 중국은 김일성 생일선물로 식량 8만 톤을 지원하여 북한으로부터 "좋은 전통과 진심의 원조"라는 공식적인 감사가 있었다.[29] 북경은 또한 북한식량난 지원 방편으로 중국 동북 3성에게 북한과 변경무역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여 변경무역이 더욱 성행하도록 하였으며[30] 북한 원유 사용 분의 약 70% 이상이 중국산 원유로 도입되었다.[31]

중국은 2000년 북한경제가 한국 및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경제난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1994~1995년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1978년에 버금가는 경제개혁과 개방을 단행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중국식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으로도 전망하지 않고 있다. 중·북 정상회담시 김정일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찬양하였으나, 이는 북한이 북한 식으로 개혁·개방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북 경제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한의 대중국 경제 및 교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28) 통일원, 「97년 1·4분기 북한-중국간 교역현황」 (1997. 5).
29) 이홍영, "통일의 국제여건과 한국의 선택," 「남북협력과 국가안보」 (한국정치학회 주최 「건국 50년의 한국정치: 도전과 선택」, 남북관계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8. 11. 14), p. 7.
30) FBIS-CHI-97-191, 10 July 1977; FBIS-CHI-98-103, 13 April 1998.
31) FBIS-CHI-97-177, 26 June 1977; FBIS-CHI-97-209, 28 July 1977; FBIS-CHI-98-021, 21 June 1998.

2. 중국의 대한국 외교정책

중국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대한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정치관계 증진을 점진적으로 도모한다는 기본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한·중 수교이후 중국은 특히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정치관계도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1996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특히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이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것을 표명함으로써[32]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보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1999년 8월 한국전쟁이후 처음으로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북경에서 개최하는 등 양국의 군 고위인사에 의한 실질적인 안보 논의 및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 1월 중순 한·중 양국은 서울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중국측은 츠하오톈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이 한·중 군부간의 정상적인 교환이라고 언급하였다.[33] 츠하오톈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정부는 핵 및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츠하오톈 국방부장은 남북한이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고 중·한간 합참의장, 육·해·공군 합참의 상호교환 방문이 금년내 성사되기를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장은 한국측이 제안한 함정의 상

32) "China: Xinhua Cites Kim Tae-chung on Results of PRC Visit," FBIS-CHI-98-317, 13 Nov 1998.

33) "Spokesman on Chi Haotian's Russia, UK, ROK Visits", FBIS-CHI-2000-0118; 「연합뉴스」, 2000. 1. 20; "ROK, PRC DefMins Agree To Regular Annual Meetings", FBIS-EAS-2000-0120.

호 방문에 대해 북한을 의식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시작으로 양국 군사교류가 점차적으로 증대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츠하오톈 국방부장에게 한국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억지를 위한 남북한 접촉 증대에 중국이 비공개적으로 협조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34] 2000년 8월 31일 한·중 양국은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합참의장 회담이 한·중 수교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실현되었으며 한국측은 함정의 상호 방문과 상호 훈련 안을 제외하고는 해상수색, 구조훈련, 군사교육기관의 상호 교환 및 교육 증대 등에 대해 중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로써 향후 중국은 한국과 점진적인 정치·군사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장쩌민-김대중 뉴욕 정상회담에서 2001년 한국의 유엔 공동의장국 선출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 의사 표시는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폭넓은 협력을 전개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중국은 한국이 대북 포용정책으로 적극 추진하는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특히 한국의 대북 물자지원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35] 그럼에도 불

---

34) "ROK President Receives Chinese Defense Minister", FBIS-EAS-2000-0119.

35)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이 현대에 금강산 지역 일대에 대한 30년간 독점 개발권을 문서로 주는 조건으로 현대가 6년간에 걸쳐 9억 4,200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지불하는 대가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현재 현대의 대북 총 송금액은 1억 5,8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동복, 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제205회 임시국회, 1999. 7. 8; 북한의 금강산 관광 예상 총수입액은 북한의 1997년도 수출 총액인 7,3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Kim Hyung-Kook, "U.S.-North Korea Negotiations: A perspective from Washington,"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구하고 북한이 한국의 대규모 지원을 내심으로 우려할 수 있어 한국이 대북 지원을 너무 빠르지 않게 서서히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양국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펴는 중국학자도 있다. 여하튼, 중국은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대규모로 성사됨으로써 북한의 정치·경제적 안정이 확보되고 동북 3성의 경제가 남북한 경협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한 양국간 경제적 협력은 교역액 측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역액은 1995년은 170억 달러, 1996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1997년 경우 250억 달러에 달하는 등 IMF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8년 212억 달러로 중국의 제3대 교역 대상국이 되었고 1999년에는 48억 달러의 대중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투자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36] 2000년도 무역액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로 인한 중국의 대한국 물자 및 부속품 수입이 증가되어 2000년 상반기에 한국의 대중 수출액 108억 달러로 대중 수입액인 53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여 약 5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중국의 대남 경제협력은 보다 강화·확대될 것이나 자국의 경제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36) China Ministry of Foreign Trade & Economic Cooperation, Statistics Data,1996~98(www.mofetec.gov.cn·official·html·statistic-data·e98-01-122), Xiaxiong Yi, "The Impact of Beijing's Changing Strategic Perceptions on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 p. 6. The Korean Associations of International Studies-The Korean Association of French Political Studies, 1999. 6. 9~10 재인용; 김시중,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동아시아연구회 - 중국, 평화군축협회 발표 논문, 1996. 10), pp. 3~5. 중국측 통계는 홍콩을 경유한 교역을 제외할 경우에도 한·중 양국은 각기 서로 제3대 교역국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대남북한 전략 및 정책을 요약하면, 중국의 남북한 현상유지 선호 전략이 추진되어 온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남북한 관계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른 대한국 안보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중·북 정치 및 안보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괄적인 대남북한 정책이 한반도 평화과정 구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남북한을 지지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노출하고 있다.

Ⅳ. 중국의 대남북한 안보 정책: 사안별 분석

1.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통제 문제

중국은 인도 및 파키스탄의 핵보유로 인해 아시아에서의 독점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훼손된 점을 감안,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비핵화를 주장함으로써 전략적 위상 실추를 만회하려는 입장에 있다. 북한을 핵 잠재보유국으로 보고 있는 중국은[37]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사용 기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사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입장에 있다.

탈냉전이후 중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하기 시작함으로써 기존의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고수하여 왔다. 중국은 핵비확산조약(NPT) 가입(1992. 3), 화학무기금지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38] 비준(1996. 4)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1996)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이 1999년 9월에 CTBT 조약에 비준한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조약

37) 「大公報」, FBIS-CHI-1999-0930.

38) 이 협정은 화학무기 생산, 보유, 전이를 금지함으로써 화학무기의 전면적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171개 나라가 협정에 서명한 반면, 북한은 여전히 서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주변국들의 협력아래 북한에 화학무기 철폐와 사찰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서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John Olson (Cooperative Monitoring Center,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Albuquerque, NM, USA), "Activities to Further Nonproliferation and Encourage Confidence Building Measur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a Whole" 참조.

서명을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현재 핵무기 선제불사용(no-first-use)을 표명하고 있어 미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하지 않은 점과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확대 가능성을 표명한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선제불사용 포기를 선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만에 대해서만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39]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실험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러시아의 지원 혹은 중국의 도움 하에 실현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러시아 과학자의 지원과 중국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짐 만 기자는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제이며 러시아 부품으로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북한에 있는 러시아 과학자의 도움으로 현재도 개발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슈무커는 여러 종류의 러시아 회사들과 북한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40] 한편 중국도 역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다는 심증은 가나 이에 대한 확증은 없다.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 20기 정도의 전략핵미사일을 보유한[41]

---

39)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처음으로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핵무기 선제불사용을 표방하여 왔다. 중국의 공식성명은 "The Chinese government hereby solemnly declares that China will never at anytime, or under any circumstances, be the first to use nuclear weapons." Michael McDevitt, "Beijing's Bid,"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2000, p. 178, p. 182에서 재인용.

40) *L. A. Times,* 2000. 9. 6.

41) 중국은 현재 20기의 DF-5A ICBM(약 8,000Km)의 미국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Michael McDevitt, "Beijing's Bid," pp. 179~180.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으나 묵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 개발에 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츠하오톈 중국 국방부장은 방한시 중국정부가 핵 및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42]

왕광야 중국 외교부 차관보는 2000년 2월 6일 뮌헨에서 개최된 NATO 안보국방 포럼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건설적인 입장에서 대할 경우 북한도 미사일과 핵의혹을 포함한 문제해결에 건설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면서 대북 무력제재 대신에 정치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문하여 미국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옹호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비난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중국이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중국은 미·북 미사일 회담기간 중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 점에 대해[43] 자국의 외교적 성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문제로 인해 북한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44] 다만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이라는

42) "Spokesman on Chi Haotian's Russia, UK, ROK Visits", FBIS-CHI-2000-0118; 연합뉴스, 2000. 1. 20, "ROK, PRC DefMins Agree To Regular Annual Meetings", FBIS-EAS-2000-0120.

43) 북한은 1997년 9월 미·북 베를린 미사일 협상시 협상 기간 중에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표방한 바 있다. William S. Cohen, "Rouge States Cannot Hope to Blackmail America or Her Allies," *Times* (London), March 1, 2000.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입장 분석은 Scott Snyder, "Pyongyang's Pressure," *The Washington Quarterly,* pp. 163~170 참조.

44) 코소보 사태과정에서 중국은 향후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미국을 지적하고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미국의 전략이 대북 장

카드를 대미 안보 보장을 얻으려는 데 크게 활용할 것으로 보고 미·북 미사일 협상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TMD 계획이[45] 점차적으로 가시화 됨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TMD 개발계획이 북한의 예상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문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46]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TMD와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미사일 개발 기술이 제고되어 동아시아에서 향유해 오고 있는 중국의 전략미사일 우위가 훼손되는 점으로서 장기적으로 일·북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 마저 포기하기를 원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 포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하려 할 것으로

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에 사용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45) 중국은 미국의 NMD 계획이 1972년 미·러간 맺은 ABM 조약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ABM 조약의 수정 노력에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TMD 계획에 대한 반대보다 심하지 않다. 러시아는 미국의 NMD 계획은 미·러의 전략미사일 감축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재래식 무기의 열등성을 보충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미·러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대미 경제지원 필요로 인해 냉전기와 같은 미·러간 미사일 및 군비경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hih Chun-Yu, "Russia Puts Forward New National Security Guidelines," FBIS-CHI-2000-0209.

46) 「人民日報」, 2000. 6. 29; "RMRB Article on US Policy on 'Rogue States'," FBIS-CHI-2000-0629, 28 Jun 2000. 중국은 미국의 난봉꾼 국가"(rogue states) 이론을 다만 미국이 무력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최근 미국이 북한을 '관심 대상 국가(countries of concern)'로 정한 것을 내심 환영하면서도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TMD 구축은 북한이 난봉꾼 국가라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일종의 강권정치의 일환이라고 비난하였다.

판단하고 있고 있는 중국학자도 있다. 중국은 북한이 말하고 있는 주한미군 용인설은 북한의 대미 카드를 상실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47]

2. 정전협정 유지문제

중국은 그 동안 남·북 관계가 안정치 못한 것이 남북이 정치적으로 양국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데 연유한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정치적 협상과 합의에 의한 남북한 평화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정전협정이 폐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치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국간에 국지적인 돌발사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4자회담 틀 내에서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하고 있다.[48] 1998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4자회담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2000년 7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6자회담 구성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이며 북한이 동 회담에 응한다면 이에 따르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여 4자

47)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연구위원과의 면담, 2000. 9. 27.

48) Su Hao, "The Unific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ism in East Asia," in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nd Prospect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b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orea Press Foundation, and Korean Information Service, 2000. 11. 2. pp. 76~77.

회담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한 평화협정이 단기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지만 평화협정이 실현될 경우 이를 수용하거나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이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체결 당사자 문제에 대해 중국은 비록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이기 하지만 자국이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임을 크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 및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인해 사실상의 전쟁상태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과 함께 수용하고 미·북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북한이 정전협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동조할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주한미군 존재문제

주한미군 존재에 대한 남북한, 미국, 중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일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장래를 기본적으로 한·미간의 문제로 인식하여 1990년대에 들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49] 중국은 북한이 한

49) 남북한 정상회담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기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반도의 미군주둔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만약 주한미군의 기능이 평화 유지에 국한된다면 북한이 미군주둔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하였다.[50] 이에 대해 중국 지도층은 전면적인 주한미군의 철수가 초래할 동북아 안보에서의 힘의 공백을 우려함과 동시에 적어도 향후 10년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북·미간 적대행위가 해소되고 정상화된 다음에는 주한미군이 남북한에 대해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지닌다면 주한미군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개선에 따른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의 감축을 자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남북한이 평화협정에 합의할 경우,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단독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전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보다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실현성이 보다 큰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후 북한이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지지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통일 실현이후의 주한미군의 존재를 역설한 데 대해

주둔을 용인하였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이 사전에 중국과 충분한 입장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중국당국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James A. Kelly, "North-South Relations after the Summit," CSIS-KINU Seoul Workshop, 2000. 11. 16, p. 9.

50) *Beijing Review*, 2000. 7. 26.

중국의 「解放軍報」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이 점점 부적절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함으로써[51]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중국의 한 학자는 한반도 통일이후에는 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52]

중국의 주 관심사는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장기적인 주일미군의 감축에 있다. 중국은 주일미군의 감축에 따른 일본의 독자적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이 대만의 국방능력을 빌미로 대대만 군사무기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위상이 주한미군 감축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 군사외교를 더욱 강화·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중·북 군사협력과 중국 군함의 남한 항구 방문 혹은 보다 정기적인 고위급 군인사의 상호 방문 등이 더욱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4. 남북한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

중국은 한반도정세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취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예측 못할 도발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으나[53], 남북한 정상회담이후 남북한간 정치적 긴장감이 감소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남북간 긴장완화 조치가 실현되고 장기적으로는 군사

---

51) 「解放軍報」, 2000. 7. 10.

52) Shiping Tang, "A Neutral Reunified Korea: A Chinese View,"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Fall/Winter, 1999, p. 466.

53) 陸佰源, "動蕩孕育調整 複雜因素增多: 1998年國際形勢回顧," 「1999國際形勢」(上海: 上海國際問題研究所編, 上海教育出版社, 1999. 11), p. 20.

적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 8월 22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대남, 대미 관계 발전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반해 중국 「人民日報」는 군사훈련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평가하여 한국의 한반도 평화노력을 지지하였다.[54]

5. 탈북자 문제

중국은 1982년 「유엔난민협약」과 「유엔난민의정서」에 가입하여 난민(refugees)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실현시켜 오고 있다. 중국은 2000년 10월 제네바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음을 표방하고 UNHCR은 난민문제 처리에 있어 비정치적이고 인권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은 UNHCR과의 보다 많은 협력을 요청하면서 난민발생 국가들이 난민보호에 기본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UNHCR이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함으로써 난민문제는 난민발생 해당국가들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55]

중국은 처음에는 자국 내에는 탈북자가 없으며 다만 국경을 불법으로 잠입하여 식량을 구하려 오는 변경주민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8년 2월 중국 정부는 탈북자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불법으로 월경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나아가 1999년 2월에는 북한주민들의 탈북 행위 자체를 억제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54) 「人民日報」, 2000. 8. 23.
55) FBIS-CHI-2000-1003, 2000. 10. 3.

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중국 당국이 탈북자 증가에 고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이라든지 '난민'이라는 개념에서 처리하기를 부정하여 UNHCR과의 협조를 꺼려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 수가 약 7,000~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 있는 자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UNHCR이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암시하고 북한당국과 중국과의 협조아래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한편, 권병현 주중 한국대사는 1999년 12월 중국이 약 5,000~6,000명의 재중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 송환했음을 밝히고 중국 당국에 대해 탈북자들을 '경제적 난민'(economic refugees)으로 대우해 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56]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한국정부의 이들 탈북자의 난민지위 획득 요구를 '신간섭주의'라고 비난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최소한의 난민지위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인권이 주권에 우선한다는 신간섭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는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인들은 소수의 불법 월경자로 이들은 유엔이 규정하는 '난민'이나 '도망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중국은 많은 북한인들이 월경하는 것은 중국내 조선족 친척을 만나려는 데 있으며 소수만이 북한

56) "AFP: ROK Envoy Says PRC Repatriated 5,000 North Koreans", FBIS-CHI-1999-1203.

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불법 월경자라고 지적하고 있다.[57]

또한 중국은 UNHCR 역시 탈북자들 모두가 난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UNHCR이 탈북자를 면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UNHCR이 재중 탈북자는 인권차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전부가 난민 지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데 있다.

1999년 11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UNHCR이 난민으로 규정한 7인의 불법 월경 탈북자를 단지 '국경주변에 있는 주민'(frontier people)으로 규정하여 국경법과 관련 국제법에 의해 처리하였음을 밝히고 향후 탈북자 문제를 중국 국내법과 인권차원에서 해결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58] 이는 중국이 난민문제를 난민 발생국가와의 협조 아래 해결할 것임을 주장한 점과 입장을 같이 한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국제규범, 중국 국내법과 인권차원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은 중국내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히 대해 왔음을 밝혀 북한당국과 협의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향후 탈북자 문제를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관점에서 처리할 것임을 재차 밝힌 것은[59] 북한의 직접적인 거부나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한 탈북자들을 묵인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

57) "Chinese Envoy Warns Against 'Neo-Interventionism' on DPRK", FBIS-EAS-1999-0902.

58) "North Koreans in China are 'Frontier People'", FBIS-CHI-1999-1102.

59) "Envoy Insists PRC Handling of DPRK Refugees 'Appropriate'," FBIS-EAS-2000-0118; "PRC FM Spokeswoman on Illegal Crossing of DPRK Citizens," FBIS-CHI-2000-0608.

중국은 이들 탈북자를 1960년에 체결된 「중·북 탈주자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과 1986년 체결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따라 강제 송환 조치하고 있다.

중국공안은 그 동안 탈북자들의 곤경을 빌미로 인신매매, 폭행, 매춘 등 영업행위를 한 중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탈북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이들이 신분상 아무런 법률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0] 탈북자들 역시 중국인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저항으로 인한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당국이 강제 송환한 탈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수는 1994~1995년 경우 1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1998년 6,300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2000년 미 인권보고서의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여러 번 강제송환 조치된 자들이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61]

중국은 탈북자 증가를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 증가를 막기 위해 1998년 9월 8만 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였음을 밝히면서 향후 사정이 허용하는 한 지속적으로 대북 지원을 할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대북 경제지원 규모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국 외교부장 탕쟈쉬옌이 북한방문 후 귀국길 도중에 연변지역 자치구를 비밀리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국측 비정부기구가 밝힌 바 있는데,[62] 이는 연변지역내 탈북자 실태를 알아보기 위

60) “AFP Cites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Conditions in PRC“, FBIS-CHI-1999-0708.
61) Lee Young Hwa, "Don't Forget the North Korean People!", 2000. 10. 1.
62) “PRC, DPRK ForMins Reportedly Discuss DPRK Defectors Issue”, FBIS-EAS-1999-1112.

함이 아닌가 사료된다.

최근 중국 공안당국은 범죄연루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길림, 연변, 동북 3성 및 국경 부근 지역에서의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한 탈북자들의 연루와 탈북자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색출작전을 전개, 탈북자를 연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족들이 이들 탈북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난민이나 단기간 중·북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을 은닉하다 적발될 경우 이전에는 약 500~3000인민폐(60~36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최근에는 5,000인민폐(약 600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10배나 강화되었다. 이러한 벌금형은 농업에 종사하는 조선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조선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약 5,000인민폐(약 600달러)벌금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족들이 이들 탈북자의 곤경에 대해 동정심을 지니고 있다.

탈북자의 구성원을 보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여성과 청소년이 많으며, 여성의 50~80% 정도가 중국내 인신매매단에 의해 팔려 다니고 있는 실정에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말 중국에서 러시아로 잠입하다 발각된 7인의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하면서 북한당국에 이들의 선처를 요구하면서도 이후 이들의 북한내 신변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양국관계의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요청은 다만 수사에 그칠 뿐이다.

중국이 한국정부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이들의 한국행을 수용하지

않고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것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들을 정치적 난민이나 경제적 난민들로 간주하지 않고 단지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여 중·북 국경조약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귀환조치하였다.

중국 공안당국은 북한에 강제 송환될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이 동북부에 있는 임시수용소에서 난동을 부려 이 중 많은 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圖們市 감옥소 중국 공안 대변인은 이들 탈북자들의 난동이 진압되어 난동자들이 국경임시수용소에서 도문 감옥소로 이송되었음을 밝히면서 이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나 처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국은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조치를 필요에 따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63]

2000년까지 중국정부는 중·북 정상회담 전후로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여 중·북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흑룡강성 농촌에 잠입해 있는 탈북자까지 색출하여 강제 송환하였다. 2000년 3월 중국당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조치가 더욱 강력하였는 바, 이는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김정일의 북경 방문시 불미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강제 송환 조치를 받은 자들 중 임시수용소에서 죽어 가는 자들이 많았다. 한편 북한은 탈북기간에 따라 처벌을 구분하고 중·북 정상회담이후 강제 송환 조치를 두 번 이하 받은 탈북자는 집단수용소로 보내지 않고 3~4개월의 조사 후에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탈북자들은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차례 강제송환 조치된 자, 중국내 한국첩자와 접촉한 자, 중국내 기독교인들의 협조를 받은 자, 그리고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 여인 및 가족들

63) “AFP: DPRK Refugee Riot Ends in PRC Internment Camp”, FBIS-CHI-2000-0421.

은 처형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조치를 강화하면서 북한당국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할수록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 내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처벌을 두려워 해 또 다시 중국으로 잠입하여 오랫동안 불법 체류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북한이 처벌을 약화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북한 내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한 강제 송환된 자의 재탈출과 탈북자들의 수는 증가될 것이다.

V. 결어: 전망

중국은 향후 동북아 정세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한반도를 둘려싼 주변 강국 간의 첨예한 모순 등으로 인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과는 직접적인 군사대결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에 따라 우선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안보대화를 증진시키고 있다. 즉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 속에서 한반도 균형외교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남북한 스스로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대화와 협상을 주도하여야만 한반도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미국이 한반도에서 패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시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반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을 비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북한간 평화협정이 4자회담 틀 내에서 실현되기를 원하고 남북한이 협의하고 합의한 협정을 미국이 함께 수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북 평화협정이나 6자회담에서 논의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북한의 주장인 유엔사령부의 완전한 해체를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감축을 요구할 것이나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이 진전되면 될수록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적어도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통일한국이 실현될 경우,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1961년 우호조약중 자동 군사개입 조항 철폐를 원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한·미 양국의 방위조약이 수정 보완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우호조약 내용을 러·북 신 조약 수준과 같은 정도로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다만 주한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남북간 국지적인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미 방위조약의 무력화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중·북 조약 중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수정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정치적 망명자'라든지 '난민'이라는 개념에서 처리하기를 부정하여 UNHCR과의 협조를 꺼려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 있는 자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UNHCR이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암시하고 북한당국과 중

국과의 협조아래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통일원.「97년 1·4분기 북한-중국간 교역현황」, 1997. 5.

Economic Intelligence Unit (EUI). Country Report: South Korea, North Korea, 3rd quarter. London: EUI, 1999.

2. 논문

김시중.「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동아시아연구회 - 중국, 평화군축협회 발표 논문, 1996. 10.

이홍영. “통일의 국제여건과 한국의 선택.”「남북협력과 국가안보」, 한국정치학회 주최「건국50년 한국정치: 도전과 선택」, 남북관계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8. 11. 14.

Cohen, William S. "Rouge States Cannot Hope to Blackmail America or Her Allies," *Times (London)*, March 1, 2000.

Huang Renwei, “Tentative Study of US Strategic Choice in the Asian-Pacific Region,” *Shijiejingji yanju(World Economy Study),* No. 1, 1994.

Kelly, James A. "North-South Relations after the Summit," CSIS-KINU Seoul Workshop, 2000. 11. 16.

Kim, Hyung-Kook. "U.S..-North Korea Negotiations: A perspective from Washington."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Kim, Samuel S. "North Korea in 1999: Bringing The Grand Chollima March Back In." *Asian Survey,* VOL. XL, NO. 1, (JANUARY/FEBRUARY 2000).

Lee, Young Hwa. "Don't Forget the North Korean People!." 2000. 10. 1.

McDevitt, Michael. "Beijing's Bid."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2000.

Olson, John (Cooperative Monitoring Center,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Albuquerque, NM, USA). "Activities to Further Nonproliferation and Encourage Confidence Building Measur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a Whole."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2000.

Roberts, Brad, Manning, Robert A., and Montarperto Ronald N. "China: The Forgotten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0.

Schell, Jonathan. "The Folly of Arms Control." *Foreign Affairs,* Volume 79, No. 5 (September/October 2000).

Snyder, Scott. "Pyongyang's Pressure." *The Washington Quarterly*.

Tang, Shiping. "A Neutral Reunified Korea: A Chinese View."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Fall/Winter, 1999.

Wang Jisi. "China's New Ident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Peaceful Order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joint international seminar by the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0. 5. 27.

Yi Xiaxiong. "The Impact of Beijing's Changing Strategic

Perceptions on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 The Korean Associations of International Studies-The Korean Association of French Political Studies, 1999. 6. 9~10.

陸佰源. "動蕩孕育調整 複雜因素增多: 1998年國際形勢回顧."『1999國際形勢』(上海: 上海國際問題研究所編, 上海教育出版社, 1999. 11).

3. 기타

『大韓每日』
『연합뉴스』.
『朝鮮日報』.
『中央日報』.
통일부.『북한동향』.

Beijing Review.
Korea Herald
L. A. Times
Times(London)

『大公報』.
『人民日報』.
『中國時報』.
『解放軍報』.

"AFP Cites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Conditions in PRC."

FBIS-CHI-1999-0708.

“AFP: DPRK Refugee Riot Ends in PRC Internment Camp.” FBIS-CHI-2000-0421.

“AFP: ROK Envoy Says PRC Repatriated 5,000 North Koreans.” FBIS-CHI-1999-1203.

Chao Chien. "Beware of the Arms Race Trap When Building a Hi-tech Army." Ching Pao, FBIS-1999-0907.

China Ministry of Foreign Trade & Economic Cooperation. Statistics Data, 1996-1998, www.mofetec.gov.cn·official·html·statistic-data·e98-01-122.

“China: Xinhua Cites Kim Tae-chung on Results of PRC Visit.” FBIS-CHI-98-317, 13 Nov 1998.

“Chinese Envoy Warns Against 'Neo-Interventionism' on DPRK." FBIS-EAS-1999-0902.

“DPRK Ministry Marks Anniversary of PRC Joining War.” FBIS-CHI-1999-1102.

“Envoy Insists PRC Handling of DPRK Refugees 'Appropriate'." FBIS-EAS-2000-0118.

FBIS-CHI-97-177, 26 June 1977.

FBIS-CHI-97-191, 10 July 1977.

FBIS-CHI-97-209, 28 July 1977.

FBIS-CHI-98-021, 21 June 1998.

FBIS-CHI-98-103, 13 April 1998.

FBIS-CHI-1999-0930.

FBIS-CHI-2000-0229.

FBIS-CHI-2000-1003.

"Further on Jiang Zemin Meeting Kim Yong-nam." FBIS-CHI-1999-0608.

"North Koreans in China are 'Frontier People'." FBIS-CHI-1999-1102.

"PRC FM Spokeswoman on Illegal Crossing of DPRK Citizens." FBIS-CHI-2000-0608.

"PRC, DPRK ForMins Reportedly Discuss DPRK Defectors Issue." FBIS-EAS-1999-1112.

"Prospects for PRC Foreign Minister's North Korea Visit Viewed." FBIS-EAS-1999-1005.

"RMRB Article on US Policy on 'Rogue States'." FBIS-CHI-2000-0629, 28 Jun 2000.

"ROK President Receives Chinese Defense Minister." FBIS-EAS-2000-0119.

"ROK, PRC DefMins Agree To Regular Annual Meetings", FBIS-EAS-2000-0120.

"Shen Guofang on Building New Security Concept." FBIS-CHI-1999-1014.

Shih Chun-Yu. "Russia Puts Forward New National Security Guidelines." FBIS-CHI-2000-0209.

"Spokesman on Chi Haotian's Russia, UK, ROK Visits." FBIS-CHI-2000-0118.

Xinhua. "International Community Urges Greater Disarmament Efforts." FBIS-CHI-1999-1023.